

“피의사실 공표 盧 前 대통령 죽음 불러”

민주, '盧 수사' 중수부장 등 3명 고발 정치보복 조사·검찰개혁 특위 구성 나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책임론에 대해 “수사는 정당했다”고 반박하고 나서자 민주당이 발끈했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 수사진 고발과 검찰 개혁 카드로 반격에 나섰다.

2일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고 있다”(노영민 대변인) “검찰이 정신 차리려면 아직도 멀었다”(김유정 대변인), “후안무치하다”(유선호 의원)는 등의 성난 목소리가 쏟아졌다.

우선, 민주당은 이날 이춘석, 김영록, 전혜숙 의원 등 당 소속 의원들이 피의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이인규 중수부장을 비롯해 수사 지휘 선상에 있는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 등 3명을 남부지검에 정식 고발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언론에 발표한 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내용이 실린 기사 프린트를 수십장을 고소장과 함께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 중수부장 등은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수시로 언론에 밝히는 등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이춘석 의원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 “형법 126조에는 범죄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공표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 부장 등은 피의사실뿐 아니라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도 브리핑이라는 명목 하에 공표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많은 국민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불러 온 박연차 수사에 법적 형평성과 정당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며 “검찰이 고소당한 대검찰청 이 부장 등을 철저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나아가 검찰개혁을 선언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차체에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국회 내에 ‘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사과와 관련,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찰개혁 특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검찰을 소관 부처로 두고 있는 국회 법사위의 유선호 위원장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상설특검제 도입은 결단만 남았다”며 검찰제도에 대한 수술에 나설 뜻을 확실히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3일 당내 ‘정치보복 진상조사 특위’를 출범시켜 검찰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 특위 위원장은 친정인 검찰에 3

번 구속됐다 3번 무죄 판결을 받은 박주선 최고위원이 맡기로 해 검찰에 가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검사가 기소했다가 무죄판결이 나면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과 불공정하게 수사하는 특정 검사를 피하는 회피신청제 도입 등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대검중수부 폐

지 ▲특별검찰청 설치 ▲감·경 수사 박주선 최고위원이 맡기로 해 검찰에 가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대변인은 “검찰이 참여정부 인사들을 타격으로 ‘먼지떨이’식 수사를 했다는 정황 증거를 수집해놓은 상태”라고 말해 검찰에 대한 공격 수위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상률 前청장·국세청 수뇌부 盧 前 대통령 자살 단초 제공”

전남 세무서 직원이 글 올려 파문

전남지역 일선 세무서 직원이 내부 통신망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국세청 수뇌부의 책임론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파문이 일자 글은 게재되지 하 루만에 삭제됐지만 국세청 안팎에서는 국세청의 책임론에 공감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전남지역 일선 세무서의 한 직원이 지난달 28일 국세청 내부 통신망에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 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이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국세청을 위기에 빠뜨리고 신뢰를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국세청 수장으로 있는 동안 직원들에게 강연하고 사회공헌

이다 뭐다 쇼를 하게 만들었다”며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해 골프를 치고 자기 출세를 위해 세무조사를 했다”고 한 전 청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국세청을 잘 대해줬다”며 “그런 그를 버려 끝까지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우리의 수장이었다니, 무슨 말로 표현해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적었다.

또 “지금이라도 국세청 수뇌부는 태광실업 세무조사 착수의 이유, 관할 지방국세청(부산국세청)이 아닌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조사를 하게 했으며 왜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는지 여부 등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명으로 게재된 이 글은 과장이 커지자 하루만에 삭제됐지만 국세청 직원들의 폭발적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글을 읽었다는 세무서의 한 직원은 “이 사태를 바라보는 많은 국세청 직원들의 마음을 대변한 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

“궤 맞추기 ‘盧 수사’ 정치적 목인 없인 불가능”

민주 ‘정치보복 진상특위’ 위원장 박주선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도를 벗어난 정치보복 수사였다.”

2일 ‘이명박정권 정치보복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광주 동·사진)은 “증거도 없이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고, 그 진술을 뒤엎고자 가족들을 불러들이는 것은 명백히 궤 맞추기용 수사로 양식있는 검찰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며 검찰 수사가 정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 수사는 먼저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사나 소환을 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이자 정도”라며 “이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

라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몰이식 수사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같은 수사는 정치적 목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또 “현 정권을 상대로 진행되던 세무조사 무마로비 사건이 전 정권으로 방향을 튼 이유와 과정도 밝혀줬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진상특위를 4개 분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4개 분과는 ▲검찰 관련 정치보복 ▲국세



청 조사 관련 정치보복 ▲노 전 대통령 친·인척과 주변의 정치보복 ▲검찰의 제도 개혁 등이다.

민주당 진상특위에는 박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에는 우윤근 원내 수석부대표, 이용삼·서갑원 의원 등 16명이 활동하게 된다.

진상특위는 3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공식 출범하게 되며, 4일 의원 워크숍에서 첫 분임토의를 갖고 향후 활동 계획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우리금융그룹

우리파이낸셜의 최고를 향한 도전!

우리파이낸셜

도청 별관 보존 문화전당 건립때

공사기간 27개월 지연

옛 전남도청 별관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할 경우, 공사기간이 27개월 연장되고 소요예산도 730억원 가량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위원장 양해령)는 2일 전남대 나간재 교수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도청 별관 철거 방침

에 대한 설계 변경이나 추진계획을 수정하는데 드는 시간적·물적 비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추진단이 이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추진단 답변서에 따르면 도청 별관을 보존하도록 계획을 변경할 경우 전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고, 그럴 경우 기본계획 재수립에 6개월, 기본·실시설계에 18개월이

소요된다. 여기에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를 재선정할 경우 3개월 정도가 더 소요된다.

추진단은 이어 “이 같이 공기가 27개월 연장될 경우 준공시기는 당초 2012년 12월에서 2015년 이후로 연기된다”며 “이에 따라 소요예산도 재설계비 20여억원, 2011년 재착공시 공사비 400여억원 등 600여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기존 공사 부분 130여억원의 낭비 가능성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하나

8개 변경노선 용역...이달말까지 최종 노선 결정

호남고속철도에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변경 용역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일 “정부는 지난 2008년 11월 발주한 기본설계 용역을 중지한 채 지난달 초 호남고속철에 무안공항을 연계시키기 위한 광주~목포 구간 8개 대안노선을 대상으로 발주한 ‘노선변경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조만간 발표한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석 조사된 8개 노선은 기존 설계 계획대로 하는 제 1안, 기존선을 개량하는 제 2안, 나주역을 거치지 않고 무안공항을 직접 경유하는 제 3안 등이다. 또 제 2안을 비롯해 제 4, 5, 6, 7안은 모두 금성산을 우회해 나주역을 경유하는 안이며 이중 6안은 나주역과 무안공항을 모두 경유하는 안이다. 8안은 함평역에서 무안공항을 일 반철도로 연결하는 방안이다.

이중 전남도는 3안을 가장 선호하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노선이 52km 연장되고 운행시간도 18분이 더 소요된다. 추가 사업비도 2조6천353억원이나 드는 부담이 있다.

금성산을 우회, 나주역을 경유하는 안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연계시키는 한편 문화재가 많은 지역 명산을 피할 수 있어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안은 노선이 72km가 늘어나고, 사업비는 2조7천899억원이 더 든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